

# 광주 상수도사업본부 도 넘은 수의계약 질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지현·이명노 시의원 지적

최근 3년간 1인 견적 470건

업체 1곳에 4년간 5억 집행도

광주시, 2인 수의계약 방식 검토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도를 넘어선 수의계약 행태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광주시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수의계약에 경쟁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지현·이명노 시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부적절한 계약을 한 상수도 사업본부는 쪼개기 1인 견적 수의계약 의혹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상수도본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470건 체결했으며, 전체 계약금액은 60억 2000여만원에 이른다.

상수도본부는 2018년부터 전기 정보통신공사를 하면서 업체 1곳과 수의계약으로 모두 4억8000만원을 집행해 최근 광주시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상수도본부에 규정을 어기거나 무자격인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처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최지현 의원은 “수의계약 문제로 인한 감사 지적은 행정의 투명성과 직결된다”며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논란은 기초자료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노 의원도 “여름 제조작업을 세 차례 하면서 600만~700만원씩 계약했고 업체까지 동일해 적절할 계약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계절에 한정된 사업은 일괄계약을 추진해 예산을 절약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대안으로 2인 이상 견적 수의 계약 방식 활용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2명 이상에게서 견적을 받아 계약자를 선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일반적인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방식이 가미된 2인 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방식도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끼리 담합하는 이른바 ‘짜짜미’를 할 경우 공정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계약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루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야간 누전 사고 등 긴급 사고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논란이 된 것 같다”며 “연초에 미리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익어가는 가을

휴일인 6일, 장성 백양사 아기단풍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보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도, 김장철 앞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전남도가 김장철을 대비해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7일부터 2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김장재료로 사용되는 새우젓, 멸치액젓, 굴, 천일염 등 대표 수산물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시장, 유명 젓갈시장, 영업사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이 지난 9월부터 시행되면서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처벌이 강화된다. 이전까지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반복 적발되더라도 동일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며, 위반 이력 관리 기간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안전 사각지대 없앤다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 워킹그룹 구성...다중 이용 시설 점검

광주시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강화 대책 마련 작업에 착수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태원 참사 국가예도 기간 이후 곧바로 ‘시민 안전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20명 안팎으로 꾸려지는 워킹그룹에는 광주시민과 민간 안전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관공서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안전시스템을 ‘시민 눈높이’에서 재점검하고 제도 정비와 시설 점검 등에 민·관이 협력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또 조례, 규칙, 훈령 등 자치 법규 1106개를 전수 조사해 제도적 안전장치도 강화하고, 시의회와 함께 이태원 참사 사례처럼 주체가 없는 행사의 관리를 위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선 개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문화·운수·판매 등 다중 이용·집합 시설 153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도 벌인다.

대전 현대아울렛과 대구 농수산물시장 화재, 서울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사고를 계기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확능력시험 이후 연말연시까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 사고 예방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피난시설·대피로 관리 상태, 소화 장비 비치, 전선 배선 상태,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가스 안전장치 설치·작동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

정이다. 시와 자치구는 물론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분야별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7일부터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통안전, 민원처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도심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선 시도때도 없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현장 관리도 엉망이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밖에도 화재와 폭발 등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가스 충전·판매소 92곳을 점검한다. 지도·점검 이행 실태, 정기·수시 검사 사항,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시는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나머지는 우선 응급조치 후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등 연말연시 기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연이은 안전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집합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면서 “시민들도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119신고 또는 안전신문고에 제보하는 등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해상풍력발전에 민간투자 촉진법 제정 시급”

광주전남연구원 보고서...인·허가 절차 복잡해 사업 지연 불가피

광주전남연구원이 전남의 핵심 현안사업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균형성장 핵심전략으로 지속 추진돼야 할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한 정책적·법률적 기반 구축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6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를 통해 보고서 ‘해상풍력 관련 국회 법제 동향과 전남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새정부 공약과제 및 민선 8기 시·도정 방향을 토대로 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는 신 균형성장전략 가운데 다섯 번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은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써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전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조선·기계·소재 등 지역의 주

력산업과 결합해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인 반면, 우리나라는 발전단지 조성 관련 규제·제도 정비가 미비해 민간투자 촉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는 10개 부처·29개 법령의 적용을 받는 등 복잡한 구조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정부의 강력한 협력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희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각의 법률안이 충돌이 아닌 합의의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강화하고,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관련 필수 기술·산업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하도록 전남 해상풍력발전 로드맵도 연계·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2022 자전거타기 그린 자전거 축제

## 11월 13일(일) 영산강 일원

장 소

영산강자전거안내센터(극락교)

참가비

전 종목 무료

중 목

자전거대행진

접 수

062-376-3112(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1. 자전거대행진 '사랑코스'** (비경쟁 퍼레이드 45km)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서창교 → 승촌보 → 나주대교 → 빛가람대교 → 영산교 → 영산대교(유채광장/반환) → 영산교 → 빛가람대교 → 나주대교 → 승촌보 → 서창교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제한시간: 오전 12시 40분까지(3시간)

**2. 자전거대행진 '행복코스'** (비경쟁 퍼레이드 25km)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 서창교 → 승촌보(반환) → 영산강자전거길 안내센터(극락교)  
 ▶제한시간: 오전 11시 10분까지(1시간 30분)

**3. 신청:** 사전 전화접수

**4. 참가자준비물:** 개인 안전장구, 자전거

**5. 자전거대행진 당일안내** (마스크 착용)

1) 참가자접결시간: 오전 9시까지(출발선 대기)  
 2) 장비점검(배변 등 부착물 체크): 오전 8시~9시  
 3) 출발시각: 오전 9시 40분

※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기념품은 배번호를 부착한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주최측은 경기 중 발생한 부상, 사고 등에 대해 응급조치 및 보험 보상규정 한도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의 건강상태(개인 지병, 혈압, 당뇨, 과로, 심장질환 등)를 고려하여 참가신청 및 개별 상해보험 가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최 | 광주일보 ·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광주본부
| 주관 |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
| 후원 | 광주광역시